

“AI 모델시티·문화 허브”... “의대 설립·재생에너지”

광주시

市,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강조
5·18 정신 헌법전문·대자보 도시
道, 석유화학 지원·초광역교통망
산업 대전환 미래 먹거리에 방점

광주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일 제시한 대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주도 초격차 성장'과 '글로벌 문화 허브' 조성이다.

전남도는 지역산업과 의료·에너지·교통 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이 핵심이다.

●광주시

광주시는 이날 'AI·문화·지속가능'이라는 3대 전략을 축으로 한 대선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 구축, 274개 AI 기업과의 투자 협약 등 국내 최고 수준의 AI 생태계를 바탕으로 'AI 모델시티 -The BRAIN 광주'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거대 AI컴퓨팅센터 구축(10조원) △AI 데이터뱅크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1조원) △글로벌 AX 실증밸리 조성(9000억원)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5000억원) △양자·휴머노이드 기반 산업 육성(1조원) 등의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AI가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AI·모빌리티 융합 시범 신도시 조성(1조8000억원) △신산업선 일방철도 건설(1조9000억원) △자율주행 시험장 구축(1조4000억원) △미래차 스마트 산단 조성(2조3000억원)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분산에너지 실증단지 조성(2조원) △배터리 모듈·시스템 특화단지 조성(5000억원) 사업을 추진해 '넷제로(Net-Zero) 분산에너지 허브'를 조성하는 것도 대선 공약으로 마련했다.

5·18민주화운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 작가 콘텐츠 등 광주만의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 주도 성장' 전략도 눈에 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을 신설하고 AI 융합 콘텐츠 문화기술 연구센터 등을 통해 글로벌 문화 허브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 조성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또 송암산단 일대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를 문화 전문 공유대학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더욱 단단

전남도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전남 미래발전 공약과제 75건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함께 5·18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도 세웠다.

광주시는 △서남권 민·군 통합공항 건설(9조원) △달빛철도 추진(7조원)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20조5000억원) 등 초광역 협력과 국가 차원의 정책 연계를 위한 대규모 사업도 함께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사업으로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신축 건설(7000억원) △광주중정역미래형환승센터 조성(2000억원) △영산강유역물순환체계 구축(2조원) △광주천 생태 복원(1조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남도

전남도는 그동안 전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전남 미래발전 중대형 프로젝트' 과제를 발표했다.

예산소요 사업비는 191조9112억원으로 국비 105조9077억원, 지방비 3조3683억원, 민간자본 82조6352억원 등이다.

전남도가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야 할 현안 가운데 1번 과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 '정부합동 의료개혁 담화문'을 통해 대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과 별개로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남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및 조선·해양 분야의 위기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 클러스터 구축 및 특구 지정을 강조한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고

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와 '광융합 극한에너지 국가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 국가 균

형발전 차원의 다분야 지역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역발전 과제로 신성장 동력, 핵심 SOC,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분야 35건을 발표했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계 남부권 초광역 항공 인프라 구축 △글로벌 해저 환경 전력계통 개발 △솔라시도 AI 자율제조 실증 허브 조성 등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 및 대전환이다.

핵심 SOC 분야에서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지원 △스마트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도 연륙·연도교 국비 지원 △호남권 재난관리원 설립 등 5개 과제를 제시하며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미래농어업 분야는 △K-와인(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스마트 농업 인프라 확충 등 7개 과제를 통해 기후변화 및 농업 스마트화에

따른 산업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관광·문화·휴양 분야로는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2031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국립 고흥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국립 서남권 해양·스포츠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 8개 과제를 발표했다.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복지 분야로는 △청년 특화구역 조성 △보육 취약지역 거점형 공동어린이집 건립·운영 △여순10·19사건 위령사업 기념 거점 조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남도에 필요한 사업 중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전국화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방점으로 총 20건을 국정제안 과제로 별도 발표했다.

이밖에 △국가출생기초수당 신설 △농어민 공익수당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전력다소비기업 지방 이전 △농협·수협 등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오지현·정상아 기자

전남도, 식품기업 3곳 유치... 434억 투자협약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기대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이가, (유)남도식품, (유)지웰리브 등 3개 기업과 43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수립한 식품산업 육성계획의 실행방안 중 하나인 식품기업 유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김태한 김이가 대표, 선종선 남도식품 대표, 윤은주 지웰리브 대표가 참석했다.

전남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지로서 2023년 기준 전국 대비 농산물 생산량의 22%, 수산물 생산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남도미향'의 이미지는 식품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 측면에 큰 강점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산물을 가공, 생산, 판매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마련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